

01 평화의 시

02 책을 열며

-종속적 한미관계,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었다. - 임종철

03 [특집] 미래한미동맹의 문제와 우리의 과제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의 문제와 한국의 선택 -서보혁

-'땅 대주고, 돈 퍼주는' 미군기지 이전 -이형수

04 [시론]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반확산 정책과 6자회담 -서재정

05 [이라크 파병반대]

-나는 반대한다! - 김현미

-미국의 침략으로 이라크 사람들이 잃은 것과 얻은 것 -한상진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한단 말인가?" -토프레드모어

06만평

07 [발언] -F-15K 도입계약, 잘못된 시정되어야한다 -장유식

08 [참가기] -원수폭 금지 세계대회 참가기 -김승국

09 [회원의 글] - 국방비 증액 및 무기도입 반대 캠페인을 하면서 -김현숙

10 [탐방]

- 부친평통사

- 민주노동당 평화군축운동본부

11 알아봅시다 - 문답으로 알아보는 미래한미동맹 1

12 평화카페 - 평화ART

13 [화보] - 대전충남 평통사 창립대회

14 NEWS

15 자료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정 및 각서> 미국 측 초안과 초안의 문제점

[책을 열며]

종속적 한-미 관계,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었다

공동대표 임종철

올해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50년이 되는 해로 이를 두고 ‘한미동맹 50년’이라고들 한다. 그러면서 따라붙는 말은 “영원한 우방”이라느니 “혈맹”이라느니 하는 말이다.

세상에! 이 지구상에서 인류 역사상 영원한 우방이 있었던가. 글썄, 몇 백 년 선린관계인 나라들은 있었지만, 그 나라들도 다툼과 전쟁을 마다 않았다. 유럽의 역사가 그렇고 아시아의 역사가 그렇지 않은가.

혈맹이라면 어떤 혈맹? 미국에 빌붙어 이익을 누리는 소수 친미매국자들의 혈맹? 군-신 혈맹? 부-자 혈맹? 형-제 혈맹? 세상에! 백인종(무색인종 또는 탈색인종)과 황인종(유색인종 또는 착색인종) 사이에 피를 나누는 동맹관계라니 그 무슨 말인가? 아마도 6·25전쟁때 북한 인민군을 상대로 전투하면서 피를 나누었다는 뜻인가. 아니면 월남전쟁때 밀림에서 전투하면서 피를 나누었다는 뜻인가.

문제는 이 “영원한 우방”이니 “혈맹”이니 하는 망언이 금과옥조를 넘어서 거의 신앙고백보다도 더 강력한 신성불가침이어서 이 낱말에 비판하는 것조차 금기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망언에 마취된 부류들에겐 이를 건드리면 부정(不淨) 타는 걸로, 그리하여 급살이라도 맞아 급사할 것처럼 펄펄 뛰는 것이다.

아니다! 친미사대주의자들은 50년이 되는 올해에 대오각성하여야 한다. 공자님 말씀에 “나 이 50이면 지천명(知天命: 하늘의 뜻을 안다)”이라 하셨다지 않던가. 정말 하늘의 뜻을 헤아릴 때가 되었다. 진실을 깨우칠 때가 되었다.

정신나간 친미매국대통령 이승만이 미국에 주권을 갖다 바친지 50년! 그 동안 미국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무소불위의 일방적 군사권을 행사해 왔던가. 우리 땅 코리아반도를 두 동강 내고 세계에서 군사밀도(또는 무기밀도)를 가장 높게 만들어 놓고 있지 않은가. 무기강매는 그 얼마인가!

서울 한복판을 포함한 무수한 군사기지와 아름다운 산꼭대기마다 박아놓은 미사일기지, 매항리폭격장을 포함한 군사훈련장 등 얼마나 맘판으로 점령하고 있는가. 작전권을 갖고 있으니 군사훈련이든 전쟁이든 자기네 마음대로라곤 하지만 그 수하 군대가 되어 50년간 우리는 얼마나 곤욕을 치러왔던가.

그런데 이제 “미래동맹구상”이라는 이름의 회의를 통해 자기네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영구주둔 또는 영구지배를 노리고 있으면서도 미사여구는 잘도 갖다 붙인다. 주한미군재배치, 용산미군기지 이전은 전적으로 자기네 군사전략을 재편성하

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한 것이면서도 마치 우리나라가 원하는 것을 큰 선심 써서 해주는 것처럼 온갖 부당한 요구들을 늘어놓고 있다. 안된다! 가라! 우리 민족은 너희들 오라고 한 적 없다. 아니면, 지금 쓰고 있는 땅값 당장 내놔라! 그도 아니면 땅세라도 당장 내놔라! 새로 500만 평을 내놓으라고? 기가 막히는 일이다. 그리고 너들 이사하는데 왜 우리가 그 돈을 대줘? 땅 한 평도 내주기 싫은데 시설비 대라, 주민 무마비도 대라?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한·미 사이의 군사관계는 멀수록 좋다. 그런데 지금 이라크에 전투사단 파병을 기정사실화해 가고 있는 꿩꿩이들을 보면 또다시 월남전쟁에 질질 끌려들어갔던 전철을 밟고야 말 것이 뻔해서 통탄할 일이다.

이제 한·미 관계가 영원한 우방은 아니라도 “정말 오랜 우방”이 되려면, 또는 혈맹은 아니라도 “정말 좋은 동맹”이 되려면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개폐되어야 한다. 이제는 군사동맹 관계를 청산하고 우호협력관계로 바꾸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미외교에 나서는 일부 몰지각한 관료들-글쎄 대통령도 의심을 떨칠 수가 없고-설치며 나대는 모습이 보면 볼수록 저리도 경망스러운가 한탄이 절로 나온다. 이제는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나서서 미국에게 단호하게 노(No!) 해야 한다. 미국의 무대뿐 강패식 일방주의에 대해 ‘반미’가 안된다고 우기려면 비미(批美) 또는 비미(非美: “NO, USA!”)라도 해야 하지 않는가.

50년이면 됐다. 영화 ‘친구’에서 조폭도 말하지 않던가, “마이 무것다 그마 해라”라고. 한·미 관계는 견줄 일도 아니다. 비참하고 참담하지 않은가!

이제 종속적 굴욕적 한·미 관계를 그만 끝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가려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우호 선린관계를 만드는 데 함께 나서야 한다. 그 관건은 우리가 자주권을 확고히 틀어쥐고 당당하게 호혜평등을 요구하는 것뿐이다.

[특집]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의 문제와 한국의 선택

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서보혁

노무현정부 들어 한미관계가 커다란 소용돌이에 들어서고 있다. 이것은 이라크 파병, 북핵 문제 등 한국정부가 의도하지 않는 사안들에 대한 한미간 공동 관심사뿐 아니라, 양국이 의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기존의 양국간 동맹관계의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는 후자를 중심으로 양국간 동맹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 그 속에서도 미국의 군사전략적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문제는 현재 한미 양국이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아래 진행하고 있는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uture of Alliance’s Policy Initiative: 이하 정책구상)’ 협의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 8~9일 서울에서 한미 양국 간에 첫 협의를 시작한 ‘정책구상’은 9월 말 현재까지 네 차례 진행되었고, 10월 초 5차 회의를 거쳐 하순에 있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지금까지 협의사항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국은 1~2차 정책구상을 통해 ‘동맹의 현대화’를 실현할 구체적인 의제와 그 방향을 설정하였다. 그것은 첫째, 한미연합전력증강, 둘째, 용산미군기지 이전, 셋째, 미 2사단 재배치, 넷째, 한미간 군사임무전환, 다섯째, 한미연합지휘체계 연구 등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이 글은 언론의 보도내용을 통해 정책구상의 성격과 방향을 추론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무기 증강=‘동맹의 현대화’?

6월 4~5일 서울에서 열린 2차 정책구상에서 한미 양국은 연합전력의 변혁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를 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미국 측은 주한미군의 전력증강을 위해 향후 4년간 110억 불을 150개 이상의 항목에 투자하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 측은 동맹강화를 위해 한국군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임을 언급하였다. 양국은 이것이 동맹의 미래와 한국의 안보를 위해 획기적인 투자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합의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양국 간 군사력 증강에 미국의 필요가 우선적으로 반영돼 있으며 이를 위해 미국이 한국에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시 행정부의 세계전략에서 동아태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일, 한·미 안보동맹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과 일본은 자위대의 군사력 증강 및 해외파병 확대, 미사일방어망 구축 등 중요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또 한국에도 같은 요구를 해왔으나 김대중 정부 때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반테러전을 명분으로 한국에 군사협력을 확대

하고 북한 '핵문제'를 재현시키며 군사력 증강을 요구해왔다. 급기야 양국이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의 현대화'에 합의한 직후 폴 윌포워츠 국방부 부장관은 서울을 방문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국방비 증액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부시행 정부의 3대 세계전략인 양대전쟁전략, 반확산전략, 반테러전략을 동아시아에서 전개해나 가는데 필요한 군사적 부담을 동맹국들에게 요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둘째, 노무현정부가 미국의 이같은 국방비 증액 요구를 한국의 필요와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국방부의 국방비 증액 요구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지속과 김대중정부 재임기간 동안 동결된 국방예산을 명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간 긴장완화는 현재 지속되고 있는 교류협력을 군사적 분야로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가능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번에 증액된 국방비가 지상군 위주의 전력에 대한 구조조정 없이 양적 증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책구상이 추진하고 있는 '동맹의 현대화'는 한반도에서 양국의 군사력 증대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지속시키고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한국을 편입시킨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기지 통폐합의 허실

또 정책구상은 용산기지과 한강 이북 미군의 재배치에 합의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같은 합의는 2차 정책구상에서 이루어졌고 3차 정책구상에서는 단계적인 추진 안을 밝힌 바 있다.

먼저, 용산기지 이전은 2006년을 완료 시점으로 잡고 현재 양국 간에 태스크 포스(Task Force)를 구성해 합의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그러나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 작전상황실 등 지휘계통의 부대 및 시설을 서울에 남기기로 합의하여 완전한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군은 각종 첨단 통신장비와 지휘 통제 시스템 등이 설치된 작전상황실을 현재 위치에 그대로 두고, 반환토지 규모도 최대한 줄이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양국간 협상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미군의 핵심 지휘체계가 서울에서 잔류하는 것이 미군의 한강 이남으로의 재배치를 고려할 때 미국의 대한방위 공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국의 수도에 외국 군대 사령부가 주둔한다는 주권침해 우려와 함께 미군이 한국군의 독자적인 국방정책을 계속해서 감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한강 이북 미군기지를 이남으로 옮기되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1단계 기지통합은 한강 이북의 기지를 두 지역으로 통폐합하고, 2단계에서는 한강 이남의 권역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양측은 2단계 완료 이후 에도 한강 이북에서 의교대 훈련을 통해 미군 주둔을 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미군의 재배치 계획은 재래식 전력을 통한 대북 억지 역할은 한국군이 맡는 대신, 미군은 유사시 한국군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그 역할을 중국 견제 등 동아시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군 재배치 지역의 하나로 알려진 오산·평택의 지리적 위치와 미국의 동아태전략 핵심이 중국의 견제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노무현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이 한국의 의도와 무관하게 한미 ‘동맹의 현대화’의 하위개념으로 전략할 가능성을 던져주고 있다. 실제로 2차 정책구상에서 양국은 한미 양국군의 임무 전환을 밝히면서, 이것이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국군의 역할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른 것임을 확인한 바 있다.

지역동맹으로의 전환

2차 정책구상에서 양국은 지역의 안정을 보다 증진하는 방향으로 미군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이것은 현재 추진되는 동맹관계의 변화가 미국의 동아태지역 전략에 대한 한국군의 역할 확대(?)라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요한 발언이 있었는데,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월 20일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처음으로 한미연합사 지휘체계, 전력 구조와 함께 방위조약의 재검토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리영희 선생은 미군이 자국에 유리한 방위조약을 개정할 필요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한미군사협력의 범위를 동북아로 확대하는 것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본지 8월호 인터뷰 참조).

실제 한미동맹이 한반도 밖으로 넘어설 가능성을 보여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7월 말 들어와 8월 초 한국에서 실시된 미 스트라이커 부대의 현지훈련이 그 하나다. 주한미군은 이 훈련이 전쟁 역지력 차원이자 대북 위협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트라이커 부대 공보실장인 조세프 픽 미군 중령은 스트라이커부대의 훈련 배경으로 한미동맹의 결속력 강화, 주한미군의 병력 보강 및 한미 전투력 증강과 함께 미 육군의 새로운 세계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는 현재 럽스펠드 국방장관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미군의 첨단화, 경량화, 기동화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동북아 유사시 미군의 군사전략과 한국군의 역할을 암시해주고 있다. 한미동맹이 지역동맹으로 나아갈 우려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미군이 9월 기존의 패트리엇(PAC-2)를 개량한 PAC-3(Patriot Advanced Capability-3)의 장비와 운영시스템을 오산, 수원, 군산 등 3개 미군기지에 실전배치한 사실이다.

미군 측 설명에 따르면 PAC-3는 한 개의 발사대에 미사일 16발(PAC-2는 4발)을 장착해 화력과 치명성을 증가하였으며 레이더 장치와 교전통제실의 기능을 향상시켜 방어 지역을 확대시켰다고 덧붙였다. 물론 PAC-3의 한반도 배치는 앞에서 말한 한반도 전력증강 계획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 장비가 미사일방어망에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과 배치 지역을 고려할 때 미국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데 한반도를 활용하고 한미동맹을 ‘개량’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자주국방의 기로

결국 정책구상은 현재의 종속적인 한미 동맹관계를 유지한 채 그 범위를 동아태지역으로 확대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양국간 군사적 역할분담을 재설정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이 추진되는 과정은 노무현정부의 '자주국방'정책의 문제를 표면화시킬 것이며 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역시 커다란 벽에 부딪힐 것이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북한과의 교류협력 속에서 북한위협론을 바탕으로 한 군사력 증강, 다른 한편으로 동북아 허브국가를 지향하면서 미국의 지역 군사전략에 편입하는 것은 북한의 반발은 물론 주변국들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정책구상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경비책임을 한국에 이양하기로 한 것을 남북한 군축과 한국군의 군사주권을 모색하는 전환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특집]

‘땅 대주고, 돈 퍼주는’ 미군기지 이전

평통사 기지협정팀 이형수

이른바 ‘한미동맹 재조정’의 일환으로 논의되어 온 용산 미군기지 이전문제가 지난 6~7일 서울에서 열린 5차 ‘미래 한-미 동맹 정책구상’ 회의에서 확정되었다.

그런데 미국이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관해 1990년에 맺은 불평등한 합의보다도 더 후퇴한 굴욕적인 내용을 강요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사실상 수용하고 있다.

그간 네 차례 회의에서 한·미 당국은 용산 미군기지를 2006년까지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되 수십만 평 규모의 한미연합사·유엔사·작전상황실과 기타 부대를 그대로 용산에 남겨두고, 30억~50억 달러의 이전비용은 모두 우리 정부가 부담하며, 100만평 가량의 대체 터를 미군에 제공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다만 잔류 규모 및 이전비용 산정에 대해서는 더 논의하고 있다.

현재 용산 기지 이전 논의는 40여가지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90년의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다.

이를 보면 미군이 이전해갈 시설들을 우리가, 그것도 미국이 요구하는 건축기준에 맞춰 지어주어야 한다.

반면, 미군에 대해서는 반환받는 용산땅의 환경복구 의무를 면제해 주고있다.

또 사기·복지·휴양 등의 편의시설이 용산 기지 이전으로 문을 닫는 기간에 입는 수익 감소분을 우리 정부가 보상해 주고, 주한미군 요원과 고용인 전원의 이사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도록 두 각서는 규정하고 있다.

기지 이전 때 미군을 위한 편의시설들을 지어주고, 심지어는 유흥·오락시설과 같은 불법적인 영업시설의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30억~50억 달러의 세금을 낭비한다는 것은 굴욕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최근 미국은 용산 기지 밖에 있는 678여 세대의 미군 숙소(한남 빌리지)를 용산기지 안으로 옮기겠다고 하면서 그 신축 비용을 우리 정부가 부담해 줄 것을 강요하는 횡포조차 서슴지 않고 있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소파) 5조를 보더라도 이전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

주권국으로서의 위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90년의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는 즉각 공개되고,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미 당국은 개괄적인 새로운 포괄협정과 세부적인 이행합의서 및 기술양해각서로 나누어 각각 협정을 맺되, 이행합의서와 기술양해각서는 제외하고 포괄협정만 우리 국회의

비준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이는 불평등한 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의 법적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저의다. 한·미 합의를 전면폐기하고, 우리 주권이 존중되는 새 협정을 체결해 세부사항까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수십만 평 규모의 잔류 부대를 용산에 남기겠다는 주한미군의 요구 또한 용산기지 전면 반환을 통해 민족공원으로의 활용과 서울의 정상적 발전을 바라는 국민염원을 수포로 돌리는 것이자, 150명만 남기고 전부 이전하겠다는 90년 합의마저도 짓밟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용산기지를 이전할테니 100만평의 대체 터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자국 이기주의다. 이미 송탄 미 공군기지와 캠프 험프리 등 456만평의 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은 2002년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에 따라 74만평이 더 확장될 예정이다. 여기에 또다시 용산 및 미2사단 이전을 위해 320만 평의 땅을 제공하기로 양쪽 당국이 최근 합의하였다.

그렇게 되면 평택은 말 그대로 '미군을 위한 미군의 도시'로 전락할 것이다. 평택 주민들은 시의회까지 나서서 '미군 총집결 반대'를 외치며 용산 및 미2사단 평택 이전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남북 화해 시대, 남한의 연간 국방비가 북한의 10배에 이르는 지금, 주한미군의 전쟁억지력은 한반도 주둔의 명분이 될 수 없다.

이제 주한미군은 감축과 단계적 철수 원칙에 따라, 즉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재배치되어야 한다.

용산 미군기지도 이런 원칙에서 기존 미군기지로 통폐합돼야 한다.

이는 기존기지를 활용해 대체 터를 최소화하기로 한 90년 한미 합의에도 맞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우리가 이전을 요구했으므로 이전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며 미국의 주장을 대변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권과 국민 자존심, 국익이란 견지에 서서 당당하게 미국에 이전비용 부담 불가, 대체 터 제공 불가 원칙에 따른 전면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시론]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반확산 정책과 6자회담

미 코넬대 교수 서재정

현재 미국 안보정책은 ‘대량살상무기 반확산’과 ‘테러와의 전쟁’을 두 가지 핵심과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부시 행정부는 다양한 정책도구들을 동원하고 있다. 이 도구들은 핵보복 공격, 비핵 선제공격, 확산방지, 봉쇄, 외교적 해결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6자회담은 이중 외교적 해결 수단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현재 부시 행정부는 소위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베이징 6자회담을 평가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전망하는 데 있어 6자회담이라는 정책도구가 차지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이유이다.

냉전시기 내내 대량살상무기, 특히 핵무기는 ‘공포의 균형’을 통한 억제가 미국 안보전략의 근간을 이루었다. 즉 적대국이 미국을 선제공격하더라도 미국은 대량으로 핵보복을 할 능력과 의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함으로써 적대국의 공격을 억제한다는 것이 억제전략의 요체였다. 냉전시기 핵국가 간의 관계가 억제전략을 통한 ‘공포의 균형’을 축으로 구성되었다면 비핵국가들과의 관계는 이들이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비확산 정책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비확산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국제적인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이었다.

그러나 2000년 9·11사태 이후 이러한 억제전략과 비확산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기에 이른다. 우선 9·11 테러사건은 ‘안전한 요새’라는 미국인의 믿음을 뿌리 채 흔들어 놓았다. 미국은 현재 불량배국가들의 대량살상무기 억제 및 방어도 쉽지 않고, 테러를 감행한 테러리스트들의 정확한 신원 및 소재 파악도 어려우며, 이들에 대한 즉각적이고도 근본적인 보복도 쉽지 않은, 세계유일 초강대국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종류의 ‘전략적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취약성을 용납할 수 없는 부시정부는 테러리즘의 근절과 소위 ‘악의 축’ 국가들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제거를 최우선적 안보과제로,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그 해결책으로 핵태세검토와 반확산 전략을 제시했다.

핵태세검토에서 미국의 핵전략은 공격, 방어, 사후처리라는 ‘신 3원전략’으로 전환된다. 지난 50년간 핵전략의 근간이었던 억제는 이제 ‘신 3원’의 하나인 방어의 한 구성원에 불과한 처지로 전략하게 되었고 공격이 ‘신 3원’의 한 축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예방전쟁 독트린에 따라 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 놓은 데 이어 핵무기를 공격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전략변화를 채택한 것은 핵선제공격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즉 부시 행정부 하에서 진행된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를 총괄하여 볼 때 미국은 미국의 안보에 필요하다면 핵무기를 동원하여 선제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핵전력 태세를 검토하고 향후 지침을 제시하는 이 보고서는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을 당면위기, 잠재적 위기, 예기치 않은 위기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이라크와 북

한은 이 세 가지 상황에 모두 적용되는 “만성적인 군사적 우려”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할 구체적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등 대북 핵전쟁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핵태세검토를 채택한 데 이어 2002년 12월에는 대량살상무기 퇴치 국가전략을 발표한다. 전자가 미국의 핵전략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며 전략의 근본적인 수정을 제시했다면, 후자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한 것이다. 전자가 억제라는 기본 핵전략을 공격으로 수정했다면, 후자는 비확산이라는 소극적인 정책을 적극적이면서도 공격적인 반확산정책으로 수정했다는 유사점을 갖는다. 즉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라면 유사 시에는 핵무기를 이용한 공격도 가능하다는 것이 핵태세검토의 주요내용이었던 것처럼 이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격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 대량살상무기 퇴치 국가전략의 주요내용인 것이다.

이 같은 “방어”수단을 제시하고 있는 ‘국가전략’은 2002년 5월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국가안보 대통령명령 (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 17호’와 ‘본토안보 대통령명령 (Homeland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 4호’의 내용 중 일부를 공개한 것이다. 공개되지 않은 명령서에는 보다 공격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지의 보도에 따르면 비밀 대통령명령은 대량살상무기나 장거리미사일 확보에 근접한 (close to acquiring) 국가나 테러리스트 조직에 대한 “선제공격”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선제공격의 정식채택은 냉전시기 내내 핵무기의 선제공격은 자제하면서 막대한 보복공격의 능력만으로 전쟁을 억제하겠다는 억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뒤엎는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변화이다.

최근 일본이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을 강화한 것도 미국 반확산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 2003년 삼국조정회의(TCOG)에서 마약과 위조화폐를 구실로 북에 대한 봉쇄를 조이는 것도 반확산 정책의 일환임은 말할 바 없다. 미국은 대북봉쇄를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최근 ‘북한 불법행위방지 구상’ (DPRK Illicit Activities Initiative)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등을 추진하고 있다. 존 볼튼 국무부 부장관이 2003년 의회 청문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미국은 이러한 일련의 ‘구상’을 통해서 “해상과 공중, 지상에서 벌어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해할 새로운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

북한 불법행위방지 구상은 북한이 마약거래, 위조지폐, 돈세탁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4월 오스트레일리아 당국이 헤로인을 밀반입한 혐의로 브리스번에서 북한의 선박을 나포한 것이나 일본이 북한에서 들어오는 선박에 대한 검색을 강화한 것도 이러한 구상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8월초에는 타이완 당국이 통관절차의 기술적인 위반을 이유로 북한 선박을 검색, 화학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을 발견, 압수하기도 했다.

한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PSI)은 2003년 5월 폴란드 크라코우 회의에서 발표된 것으로 미국과 영국, 일본을 비롯해서 스페인과 독일,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이태리, 네덜

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등 11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미국은 이후 스페인 마드리드와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 회의를 연이어 개최, 미국의 군사적 반확산 정책을 국제적인 협약 및 기구로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미국은 2003년 6월 마드리드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물자를 실은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 밀수출 저지, 자국 영해와 영공 통과 저지, 공해상 임검실시 등 3개 항목을 제안했다. 이어 2003년 7월 브리즈번 회의에 미국 대표단장으로 참석한 존 볼턴 미 국무부 국축담당차관은 “미국은 공해 상에서 PSI국가들의 병력이 북한 선박을 요격하도록 할 법적 권한을 이미 갖고 있다”며 반확산을 위한 군사력 사용을 적극적으로 촉구했다. PSI 참가국들은 북에 대해 당장 직접적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은 반대했지만, 2003년 9월 해상임검 합동훈련에는 참가하는 등 미국의 반확산 정책에 따라가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합동훈련 직전 프랑스 파리에서 제3차 PSI를 개최, 대량살상무기 확산의 차단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명시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해 상에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와 동시에 부시 행정부는 6자회담을 외교적 해결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9월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불법화하고 △대량살상무기 관련물질의 엄격한 수출통제를 입법화할 것 등을 요구하는 안보리 결의안의 채택을 요구한 것도 반확산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외교적 정책 수단의 하나인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반확산 정책에 대한 신념이 확고할 뿐 아니라 북한과 이란을 현 반확산 정책의 주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동원되고 있다. (2003년 9월 29일)

[발 언]

F-15K 도입계약, 잘못은 시정되어야 한다.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변호사 장유식

1. 얼마전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한 ‘2002년 방위력 개선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8월 17일 국방부가 한나라당 이성현 의원에게 제출한 ‘2002년 방위력 개선사업 감사 조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F-X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평가과정이 투명하지 못함으로써 ‘기종평가가 부적정했다’고 판정되었으며, ‘F-15K 엔진구매 계약이 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체결된 사실’도 확인되었다.

F-X 사업이 ‘एं터리 미제비행기 사들이기 놀음’이었다는 사실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터라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정작 국민들을 경악시킨 것은 이처럼 명백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내린 결론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주의’ 조치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2. 감사원은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 직속의 국가 최고 감사기관이다.

감사원은 직무감찰, 회계검사 등을 통해 감사결과 발견된 비위사실에 대해 고발, 징계, 해임, 문책요구, 변상책임의 판정, 시정, 개선 등의 요구, 권고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감사원법 제31조 내지 제35조).

그런데, F-X 사업의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내린 ‘주의’조치는 감사원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그야말로 하나하나한 처분인 것이다. ‘기종평가가 부적정하다’고 밝힌 감사원의 지적은 F-15K 기종선정이 국방부의 온갖 전횡과 불법에 의해 이뤄진 것임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F-15K 선정에 대해 어떠한 실효적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F-15K 선정에 또다시 면죄부를 주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3. 감사결과를 전면공개하지 않아 모든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감사원은 ‘기종평가는 부적절하지만 어쩔수 없다’는 해괴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감사원의 결론을 최대한 선의로 해석하자면 아마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고, 예산이 책정·통과되었으며, 일부 예산은 이미 집행되었으므로 이제 와서 F-15K 도입계약을 백지화하면 큰 혼란과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지난해 노도와 같이 일어났던 F-X 반대투쟁은 단순히 기종평가의 문제점이나 예산의 낭비만을 지적한 것이 아니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F-X 사업에 의해 이미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는 고물비행기를 강매당하는데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패권적 동북아전략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에 대한 한국민들의 결연한 반대의지의 표출이었다.

둘째, 보잉사와의 F-15K 도입 본계약이 체결된 지 벌써 1년이 훨씬 지났지만 아직도 절충교역에 관한 협상이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는가 하면 보잉사가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주

기로 하였던 절충교역 ‘섹션 일레븐’도 제멋대로 호주에 넘기는 등 보잉사의 계약 위반과 횡포가 그치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의 비호하에 계속적인 횡포를 일삼는 보잉사와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할 의무가 없다.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며, 계약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국제계약법에 의해 철저한 책임추궁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방부는 F-X 사업을 강행추진하면서, 평가과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F-X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여러 차례 국민 앞에 했다. ‘기종평가의 부적절성’이 명명백백히 지적된 이상 지금이라도 사업의 재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 순리이다. 국방예산의 단순삭감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혈세이며, 공군 조종사들의 생명이고 미래의 영공방위 능력일 것이다.

넷째, 감사원의 F-X 사업에 대한 감사는 이미 오래전에 실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그 발표시기를 늦추었을 뿐이다. 더구나, 감사원이 F-X 사업에 대한 시민단체의 국민감사 청구를 기각한 이유가 “자체 감사계획이 있기 때문에 중복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감사원이 감사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뒷북치는 행동을 계속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밖에 할 수 없다.

4. 결국, 감사원의 조치는 정당하지 않다. 잘못이 있으면 시정해야지 그대로 덮어둘 수는 없는 일이다.

물론, 현실론이 있을 수 있다. 더구나, 최근 이라크 파병과 국방비 증액과 관련해서 노무현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를 보면, F-X 사업의 잘못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생뚱맞은 일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다.

지난 봄의 이라크 파병도 문제거니와 최근에는 다시 1만 명 규모의 전투병 파병까지 고려되고 있다. 노무현정부의 태도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국민 여론에 따르겠다”는 것이지만, 조사단 현지 파견 등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 이미 ‘국민’의 뜻이 아니라, ‘부시’의 뜻에 의해 착착 진행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국방비 증액과 관련된 행보는 답답증을 더해준다. 작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통일분야 공약에서 당시 노무현 후보는 “남북의 군비삭감 등을 위한 군축 내지 군비통제 회담을 개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남북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군비축소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외교통상분야 공약에서 “동아시아의 평화협력을 촉진하고 동아시아 평화협력체 창설을 주도하여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 중심국가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대통령 스스로 지난 8·15 경축사에서 이른바 “자주국방론”을 내세워 군비증강의 의지를 천명한 데 이어, 지난 9월 23일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1% 증액된 18조 9,412억 원으로 결정하였다. 내년도 정부예산 총 증액분 2조 4,129억 원의 62.8%인 1조 5,148억 원이 국방예산 증액에 투입되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국방비 대폭 증액이 대부분 미국의 압력에 의한 무기 구매에 쓰일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에 대한 군사적 종속을 심화시킬 미제 무기 도입은 ‘자주국방’의 시작이 아니라, 종말에 불과하다.

5. 참여정부의 최근 행태가 굴절된 한미관계를 반영하는 것임을 생각할 때, 더 이상 두고볼 수만은 없다.

미국의 패권주의에 반대하는 한국민들의 목소리를 당당히 전하고, 남북공조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명백히 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F-X 사업의 잘못을 시정하는 일이 될 것이다. 6조원의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향후 십수년간의 국방정책, 나아가 통일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선택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방부와 청와대는 F-X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포함한 모든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제라도 미국에 대해 할 말은 해야 한다.

[참 가 기]

원수폭 금지 세계대회 참가기

평통사 대외협력위원장 김승국

‘원수폭’이란 원자폭탄 수소폭탄을 말하며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라늄 핵폭탄이 떨어짐으로써 ‘핵무기에 의한 집단학살(nuke-genocide)’ 시대를 열었다(일제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히로시마·나가사키에서 고생하던 조선인 수만 명도 피폭 당함). 이 핵무기는 미-소 핵무기 경쟁으로 상징되는 냉전시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의 핵개발·대량파괴무기 보유 문제를 예워싼 ‘미국의 북한 공격’의 수단으로 핵무기 사용(소형 핵무기 등)이 내정되어 있어서 핵무기 문제는 우리에게도 비상한 관심사이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이 대회에 참석한 필자는 1년 사이에 격변한 세계정세를 읽을 수 있었다. 우선 이라크 전쟁과 관련된 미국의 제국주의적 전쟁정책에서 핵의 사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현실이 이 대회의 가장 큰 현안이었으며, 일본 국내외의 문제로서 ‘유사법제(有事法制)’ 통과 이후에 반핵평화운동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느냐도 지대한 관심사였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전쟁정책과 일본의 유사법제는 모두 한반도의 운명(전쟁이나 평화나)과 직결된 문제이어서 조금도 한눈을 팔 수 없었다.

그럼 지난 8월 2일부터 일본의 히로시마·나가사키에서 열린 ‘원수폭(原水爆) 금지 2003 세계대회’를 날짜별로 전해보겠다.

8월 3일 국제회의

8월 3일 오후 2시 히로시마 후생연금 회관에서 ‘원수폭 금지 2003 세계대회의 국제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지금이야말로 핵무기도 전쟁도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이라는 주제를 내걸었다. 이 회의에 23개국, 6개 국제·지역조직에서 64명의 해외대표를 포함한 3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는 미국·영국의 유엔헌장을 무시한 이라크 침략전쟁과 불법적인 점령,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를 구실로 한 군사대항 전략,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로서 (북한 등 강대국이 지도부를 괴멸시키려는) 소형 핵무기 개발에 비판이 집중되었다.

주최자를 대표하여 피폭자인 澤田昭二(원수폭 금지 일본 협의회 대표이사)가 인사말을 했다. 그는 이라크 전쟁을 통해 전 세계에서 ‘전쟁 NO, 평화의 Rule을 지켜라’(이번 세계대회를 주최한 일본 측에서는 ‘평화의 Rule-유엔헌장의 평화 원칙 rule’를 지키라는 말을 애용했다)는 목소리가 높았음을 상기시키면서 “핵무기도 전쟁도 없는 세계로 전진하자”고 호소했다.

이어 피폭자를 대표한 小西悟 일본피폭자 단체 협의회 사무국 차장이 58년 전 히로시마에서의 피폭 체험을 말하며 “중동이나 아시아 제국에서 핵전쟁의 지옥이 재현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라크 공격을 에워싼 운동과 과제'에 관한 제1회의와 '새로운 핵무기 사용, 핵개발의 위험과 핵무기 철폐의 전망'이란 주제의 제2회의가 열렸다.

8월 4일 분과회의

8월 3일의 국제회의에 다룬 문제를 더욱 구체화하기 위한 분과(分科)회의가 열렸다. 분과회의는 ① 유엔 중심의 평화질서와 평화운동의 과제(제1분과) ② 핵무기 사용·핵개발의 위험과 핵무기 철폐의 전망(제2분과) ③ 피폭자·핵 피해자, 피폭실상의 홍보와 원호 연대(제3분과)라는 3개의 주제로 나뉘어 개최되었다.

8월 5일 회의

3일째 계속된 국제회의는 이라크 전쟁반대 운동의 힘을 결집하여 반핵평화운동에 나서자는 내용의 국제회의 선언을 채택하고 폐회했다.

이 국제회의 선언은 “죄 없는 다수의 시민을 살상한 미국·영국군에 의한 이라크 전쟁은, ‘국제분쟁은 유엔을 통하여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유린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부시 정권의 핵전략으로 인한 ‘제2의 히로시마, 제2의 나가사키’의 위험을 지적했다. 선언은 또 미·일 군사동맹 아래에서 미국을 추종하는 자위대의 해외파병 등의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정부를 비판했다.

8월 6일 히로시마 피폭의 날

피폭 58주년을 맞이한 이날 오전 평화공원에서 ‘평화기념 식전(式典)’이 히로시마 시의 주최로 거행되었다. 약 4만 명이 참석한 이 식전에서 秋葉忠利 히로시마 시장이 ‘평화선언’을 낭독했다. 그는 ‘평화 선언’에서 ‘핵확산금지조약 체제가 붕괴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말하고 ‘핵무기의 선제사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지목하여 소형 핵무기의 연구를 재개한 미국의 핵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와 동시에 유엔헌장을 무시한 이라크 전쟁도 비난했다.

이어 오후에 열린 ‘원수폭 금지 2003 세계대회의 히로시마 전체 총회’가 폭심지(爆心地; epic center)에서 5백 미터 떨어진 히로시마 현립 종합 체육관에서 열렸다.

64명의 해외대표를 포함한 2,300명이 참석한 옥내 대중집회에서 부시 정권의 야만적인 전쟁정책을 중지시키고 핵무기를 철폐하자고 결의했다. 이 집회에 히로시마 시장이 특별강연을 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 집회에서는 ‘히로시마로부터의 호소’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집회는 히로시마에서의 ‘원수폭 금지 세계대회’를 총결산하는 모임이었다. 7일부터 나가사키로 장소를 옮겨 ‘원수폭 금지 세계대회’를 속개했다. 올해는 나가사키 대회에 역량을 집중하는 해이므로 나가사키 대회에 더 큰 관심이 있었다.

8월 7일 나가사키에서

‘원수폭 금지 2003 세계대회·나가사키’가 7일 시민회관에서 개막되었다. 한국의 8·15 행사 때 통일 선봉대가 전국을 순례하듯 일본도 8월 3~9일 히로시마·나가사키 반핵 대회에 즈음하여 전국을 몇 개의 코스로 나눠 순례한 다음 모두 히로시마·나가사키로 집결한다. 올해는 나가사키에 모두 집중하는 해이므로, 순례단, 평화 단체, NGO, 일반 시민 등 7,300명이 시민회관에 운집했다.

해외대표 60명이 단상에 오른 다음 옥내 대중집회가 시작되었다. 올해는 지난해 대회에 비하여 더욱 열기가 있었고 젊은이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지난해 이라크 전쟁 반대운동에 열중한 저력이 이 대회로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8월 8일 분과회의

이날 핵무기 문제, 이라크 전쟁, 유사법제, 피폭자 문제 등 12가지 주제로 분과회의가 열렸다.

250명이 참석한 제1분과회에서는 주로 미국의 핵무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450명이 참석한 제2분과회의에서는 미국의 불법적인 이라크 전쟁과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에 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8월 9일 나가사키 피폭일

나가사키의 평화식전이, 58년 전 8월 9일 오전 11시 2분, 원자폭탄이 떨어진 시각에 맞춰 열렸다. 나가사키 시장은 ‘평화선언’에서 “영국·미국은 이라크의 대량파괴무기 보유를 이유로 유엔의 결의를 얻지 않고 전쟁을 강행했다”고 고발했다. 그는 “소형 핵무기 등의 개발이나 핵폭발 실험의 재개를 시사하며 경우에 따라 핵무기의 사용을 不辭하는” 미국의 핵전략을 엄혹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한반도의 비핵화 공동선언의 실현과 북·일 평양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동북 아시아 비핵지대의 창설에 착수하자고 호소했다.

이어 이날 오후에 ‘원수폭 금지 2003 세계대회’의 폐막식이 나가사키 시민회관에서 7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해외대표, 피폭자, 일본 NGO 대표의 발언에 이어 일본 전국의 청년·학생 단체들이 등단하여 반핵평화의 의지를 드높였다. 7천여 명이 ‘We shall overcome’을 열창하는 가운데 ‘원수폭 금지 2003 세계대회’의 막이 내렸다.

[평화단체 탐방]

민주노동당 평화군축운동본부
민주노동당 평화군축운동본부 정태연 부장

▶ ‘평화군축운동본부’는 언제, 어떤 취지로,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당에서 반전평화운동과 군비축소운동을 전당적 차원에서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2001년 12월 민주노동당 제4기 중앙위원회 결의로 ‘평화군축운동본부’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당 소속으로 자주통일위원회, 소파개정과 한반도평화실현 운동본부, 평화군축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당의 골간 체계이며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운동본부를 만들게 됩니다.

▶ ‘평화군축운동본부’는 현재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반전평화운동과 군비축소운동을 전체적인 주제로 삼고 있으며 주로 해오고 있는 활동은 통일,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의 당 정책 생산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시기마다 통일, 외교, 안보 분야와 관련된 당의 입장 정리와 논평, 성명 등을 발표하고 있고, 시도 지부나 지구당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강연, 토론회(윌레평화포럼)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전평화운동과 군비축소운동을 전 당원과 함께 하면서 국민들에게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대중적인 평화군축운동 사업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정책생산, 입장발표, 교육사업, 대중운동 등 4가지 사업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3년 하반기에는 국방예산증액 저지 활동과 통일, 외교, 안보 분야의 국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활동, 그리고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운동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 ‘평화군축운동본부’와 각 지구당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당은 조직국과 각각의 부서가 중앙당을 구성하고 있으며, 16개 시도지부, 128개의 지구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라크 한국군 파병문제가 있을 때 평화군축운동본부는 일반 부서와 회의를 통해 중앙당의 지침을 만들어서 공지사향과 공문을 통해 각 지부와 지국에 보내면 이를 지부와 지국에서 실행에 옮기는 체계입니다.

▶ ‘평화군축운동본부’는 주로 어떤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며, 회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80년대부터 노동운동, 조합운동, 진보정당운동을 해오신 운영상 본부장님이 계십니다. 본부장님은 94년~96년까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국방 관련 보좌관들의 협의 기구를 만들고 평화군축문제를 연구해온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과 전문성이 높이 평가되어 본부장님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석, 박사들로 구성된 정책위원들 다섯 분이 계십니다.

평화군축운동본부에 지난 5월까지의 상근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생산과 입장발표 부분에 비해 대중적인 활동이 약했습니다.

제가 지난 5월부터 상근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 대중활동이나 연대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상임정책위원이자 당의 평화군축운동본부의 부장입니다. 본부에는 평화군축운동에 관심이 많으신 당 내외의 당원 및 지지자들이 활동 중이며, 회원 체계가 아니므로 회원은 없습니다.

▶ ‘평화군축운동본부’의 자랑거리와 어려움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군축운동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라 할 수 있고, 작년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권영길 후보의 통일, 외교, 안보 분야 공약집인 『PEACE PROCESS』를 평화군축운동본부가 중심이 되어서 작성, 제출하여 이 분야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확고한 평화적 원칙을 당 내외에 천명한 것이 주요한 성과입니다.

어려운 점은 체계 자체가 중앙당의 한시적인 운동본부이고, 또 정책위원 체계로 되어있다 보니까, 즉 회원체계가 아니다 보니까 각 시도 본부나 지구당의 평당원들과 결속력이 협소하다는 점입니다. 강연 등을 통해 당원들을 만나기는 하지만 교육에 나오시는 분들이 한정적이고 일회적이어서... 그리고 지구당의 지역사업에 대한 부담으로 당의 정책 집행과 교육이 안정화되어 있지 못한 점이 평화군축운동을 확산시키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정책 입안 능력과 평화군축 분야의 연구 전문가 집단과의 네트워크 보완이 필요합니다. 당내 각 시도 본부나 지구당과의 사업 접촉면이 협소하여 당원들과의 일상적인 의사 교류 및 사업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죠.

▶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책위원들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다 각자의 생활과 프로그램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하지 못하고 저 혼자 끙끙 앓고 있는데 구상은 있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평화군축운동본부가 회원제 가입방식이 되든지 아니면 각 지구당에서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핵심적으로 활동하는 분들과 긴밀한 연락망을 구축해서 발전되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는 평화군축운동본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 전국 지구당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의 개발과 교육자료의 축적 및 첨단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논의되고 있으며, 국내 연구집단 및 학자들과의 교류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 ‘평화군축운동본부’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2004년 총선에서 내세울 당 후보군의 통일, 외교, 안보 분야의 공약 및 정책을 생산해 내야 합니다. 그리고 국방예산증액의 저지활동 및 군비축소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논리와 반전평화운동의 전당·전국적 확산을 위한 사업의 개발입니다.

또한 국방부 등 관련 행정부, 의회에 대한 안정적인 정보접근권을 확보하는 것 등이 있습니

다.

▶ ‘평통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국방문제와 관련해서 국방예산이나 군비축소, MD시스템, 신무기도입을 포함해서 군사·안보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집회에서도, 평통사 웹사이트에 들어가 봐도 자료의 업데이트 속도나 사진 같은 것을 충실하게 관리하시고 해서 배울 점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척박한 평화군축운동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군축운동을 전개해왔을 뿐만 아니라, 가장 헌신적으로 활동하여 상당한 경험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평통사도 지난 6월 6일 평화군축과 자주통일을 구호를 내걸고 재창립을 하였는데요. 평화군축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평통사 회원들에게 연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평통사의 회원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지금까지 당에서 반전평화운동과 군비축소운동의 분야의 활동을 해오면서 평통사에 대해 많은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뢰가 사소한 정책차이를 떠나 굳건한 평화운동을 만들어 가는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통사 회원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만큼 우리 평화군축운동본부도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 인터뷰·정리 | 서울 평통사 박종양

[알아봅시다]

세계평화 파괴의 두목인 부시의 오른팔 린스펠드가 오는 24일 서울에 옵니다. 그가 서울에 오는 것은 향후 50년의 한미관계를 규정한다는 한미 고위 당국자들 사이의 이른바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 결과를 최종 확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내용의 문제점을 문답으로 알아봅니다. 내용이 많아서 다음 호에도 이어 신습니다.

- 편집자 주 -

문답으로 알아보는 미래 한미동맹 I

* 미국이 미래한미동맹논의를 통해 한미안보동맹을 변화시키려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미국은 첨단기술을 이용해서 미군을 개혁하고 전세계에 주둔해 있는 미군을 재편하고 있는데(이른바 신군사전략) 그 한 부분으로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 등에 대한 조정을 하려는 것이다. 또한 50년 동안 주한미군이 눌러있는 것도 정글정글한데 앞으로 50년간, 통일이 후까지도 주한미군이 안정적으로 주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 무엇이 바뀌는 것인가요?

요약하자면 미국이 자신의 신군사전략을 한반도에 적용하기 위해 미군기지를 한강 이남으로 재편하고 엄청난 돈을 들여 공격용 무기들을 들여오면서 자신의 역할을 동북아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서울 한북관을 100만평 가까이 점령하고 있는 용산 미군기지의 80% 정도를 2006년까지 평택으로 옮길 계획이다. 두 여중생을 죽인 미 2사단이 2단계에 걸쳐 역시 평택으로 옮긴다. 또한 한미양국은 엄청난 돈을 들여 MD무기, 공격용 무기들을 들여오고, 미 2사단이 옮김에 따라 JSA(공동경비구역) 경비책임 등 미군이 하던 일을 한국군이 맡아서 하게 된다. 그러면 주한미군은? 동북아 세력균형자(?)로 올라앉는 거지. 노무현이 몇 차례 강조했던 전시작전권은? 연구하기로 했단다. 이런...

* 미국의 신군사전략이란 무엇인가요?

미국은 무려 세계 40여 나라에 30만 명에 이르는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데 주한미군 재배치뿐 아니라 독일주둔 미군의 일부를 동유럽으로, 사우디 주둔 미군을 중동의 다른 나라들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동시에 보병은 줄이되 기동성을 높이고(신속기동군) 첨단 무기를 갖춘 공군과 해군력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것이 미국의 이른바 신군사전략이다. 미군재편의 목적은 한마디로 소련이 자빠진 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된 자신의 군사적 힘을 이용하여 미

국이 제멋대로 만드는 세계질서에 방해되는 불량국가 또는 테러국가를 선제 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자는 것이며, 나아가 잠재적국인 중국에 대한 포위와 압박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 그렇다면 주한미군이 남쪽으로 이전하는 것은 북한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준비인가요?

그렇다. 휴전선에 밀집된 북의 장사정포 등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미군기지를 옮겨서 작전계획 5027에 따른 선제공격·정밀폭격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 미국이 주한미군을 재편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동북아지역 안정군이라는 허울아래 주한미군을 통일이후까지도 마르고 닳도록 영구 주둔시키기 위해 미군기지를 효율적으로 재편하자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흩어져있는 90여개 미군기지를 평택지역과 대구·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헤쳐모여 시키면서 미2사단은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 재편하고 일부병력은 철수할 예정이다.

동북아 지역안정군? 신군사전략 중 하나가 군사력의 초점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옮긴다는 것인데 소련이 자빠진 후 미국과 맞장뜰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나라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이다. 미군이 동북아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 자세히 알아보겠다.

*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의 요구니까 한국이 돈 퍼주고 땅도 대야 한다는데....?

용산기지를 왜 옮길까? 미국 주장은 한국사람을 위해서, 한국의 요구로 용산기지를 옮기므로 한국이 땅도 내놓고 돈도 퍼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군이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것이 서울사람을 위해서라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지난 4차 '미래한미동맹' 회의 때 제시한 미국측 협정 초안에는 재배치의 목적이 '영속적인 주한미군의 체계를 세우는 데 기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주한미군은 자신들의 군사전략적 필요에 의해서 옮기는 것이다. 그런데도 걸포장을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옮기는 것처럼 꾸며서 이전비용을 모조리 한국에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이다. 덩으로 용산기지 이전으로 한국민의 높아진 반미감정을 무마시키겠다는 계산도 하고 있겠지. 한국민을 위해서 옮긴다고 미국이 우기려면 90년 노태우 때 96년까지 옮기겠다고 약속은 왜 박살냈는지 먼저 해명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용산 기지를 옮긴다면서도 16만평 가량은 한미연합사령부, 유엔사령부 등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쓰고, 1만 명 중 7천 명을 남기겠다고 하면서 이전은 무슨 이전?

* 미국은 군부대 옮기는데 왜 20조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달라고 요구하죠?

한국의 요구로 옮긴다는 핑계로 온갖 것을 다 뒤집어씌우기 때문이다. 혈압에 문제가 있는 분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미국의 뒤집어씌우기 수작을 알아보자.

‘50년 된 낡은 시설들을 평택에 새로 지어주되 최첨단·최고급으로 지을 것, 남게 된 용산의 시설은 재건축내지는 리모델링할 것, 빠짱코 등 도박시설을 포함한 서비스업종이 이사가는 동안 장사못해서 돈못버는 만큼을 메꿔줄 것, 군대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정규직이든 임시직이든 주한미군 직원들의 개인적인 이사비용도 한국정부가 댈 것, 또 빠진 것 없나? 그래! 미군자녀들의 과외교사가 평택까지 오가는 교통비를 빠뜨리면 섭하겠지?’

음..... 작년 11월 말 무죄판결을 받은 워커란 놈이 “한국은 아주 지내기 좋은 곳이다.”라고 지껄었다는데, 미국은 명령하고 한국정부는 온갖 것을 다 갖다 바치게 됐으니 쯤.....

* 미 2사단도 평택으로 옮긴다는데 2사단은 어떤 부대인가요?

여중생사건 등 온갖 범죄로 악명을 떨쳐온 미 2사단은 5천명 정도(2사단 3여단)이 92년에 철수한 이후 현재는 1만 4천여 명(주한미군의 40%)이 파주, 양주, 동두천, 의정부 등에 5천만 평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장비는 M1A1 탱크 140대, 155mm 팔라딘 자주곡사포 30여문, 다연장로켓(MLRS) 30여문, AH-64 아파치 공격용 헬기 40여대 등이다. 독자들에게 생소할 무기이름을 소개한 이유는 다음 호를 보시면 알게 된다.

* 2사단은 어떻게 재편한다는 것인가요?

현재까지 한미간에 합의한 것은 미2사단을 1단계로 2006년까지 동두천과 의정부로 통폐합하고 2006년 이후 평택으로 옮긴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2사단이 평택으로 옮기는 까닭은 앞에서 선제공격과 동북아 지역안정군으로의 재편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2사단의 재편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미 국방정보국 동아시아국장 아리고니란 자가 지난 6월1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관계협의회(공동의장 유재건, 제임스 릴리) 창립총회에 참석, “주한미군 2사단은 매우 근본적으로 재편돼 알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의 독특한 편제는 ‘타격 부대(stryker brigade)’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대체될 것이다”고 말했다고 한다.

스트라이커 부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유사시 분쟁지역에 신속히 파견돼 전쟁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미군이 새로 만든 신속기동여단이다. 부대가 만들어진 후 첫 훈련을 지난 8월초 포천에서 했는데 이 부대가 바로 92년에 철수한 2사단 3여단이라고 한다.

이런 사실들로 봤을 때 미2사단을 동북아 지역 어느 곳이든지 신속하게 배치될 수 있는 기동군으로 바꾸고, 주한미군 중 7,000명 가량은 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실]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정> 및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정 이행 합의각서> 미국 측 초안과 초안의 문제점

미국은 지난 9월 3~4일 양일간 서울(국방부)에서 열린 제4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 4차 회의에서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정> 및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정 이행 합의각서>의 미국측 초안(이하 초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초안'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평통사는 이 '초안'과 동일내용의 문건을 입수하여 공개함으로써 자칫 문힐뻔 한 용산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흑막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초안'의 전문을 번역한 것으로 영어본은 평통사 홈페이지(www.spark946.org) 자료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독자의 이해를 위해 평통사에서 정리한 초안의 문제점을 맨 앞에 실었습니다.

-편집자주-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정 및 각서 미국 측 초안>의 문제점

1. 미국 측 안에 관한 간단한 설명

1) 미국 측 안의 정식 명칭

- ①<서울 중심지로부터 미군기지 이전을 추진하는데 따른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 협정>(이하 '협정')
- ②<서울로부터 미군기지 이전(용산기지 이전 계획)추진에 있어 미국과 한국간 협정 이행을 위한 합의 권고 합동위원회를 위한 각서>(이하 '각서')

2) 미국의 '협정'과 '각서'의 위상과 문제점

- ① 미국의 '협정'과 '각서'는 불평등한 90년의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에 기초하고 있고 그것을 대체하는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 보다도 훨씬 후퇴한 굴욕적인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다.
- ② 한국은 따로 안을 내놓지 않고 미국에서 내놓은 '협정'과 '각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5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10월 6~8일 예정)에서 거의 그대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그간 유엔사·한미연합사의 잔류, 이전비용의 한국 부담, 대체부지 제공, 용산 미군기지 이전 시기 등의 문제에서 미국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었으므로 현재 논의 중인 이전비용 규모, 잔류부대의 규모 등도 마찬가지로 일 것으로 보인다.

③ 특히 90년의 굴욕적인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을 실무적으로 주도한 반기문(당시 외무부 미주국장)과 김희상(당시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현재도 각각 청와대 외교보좌관과 국방보좌관으로 재직하고 있고, 이들의 지휘 하에 현재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의 실무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과 위성락 외통부 북미국장이 미국의 이해를 대변하는데 앞장서고 있어 이 같은 우리의 우려를 뒷받침한다.

2. 미국 측의 ‘협정’ 및 ‘각서’의 핵심적인 문제점

1) 효율적이고 영구적인 주한미군의 용산 주둔을 노리고 있다

① “유엔사와 한미연합사, 두 본부 지원에 필요한 주한미군 부대들, 서울 북부 및 서울 내의 군사작전을 수행할 부대들은 한국 국방부 인근에 남게 될 것”(‘협정’ 제3조 6항)이라는 내용은 용산 미군기지의 가장 중심적 기능인 한미연합사를 그대로 용산에 남김으로써 이른바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라는 포장 속에서 사실은 주한미군의 영구적인 용산주둔을 노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②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쥐고 있는 한미연합사가 용산에 계속 주둔하고 그 기지 시설을 현대화, 첨단화하며 그에 대한 비용을 한국에 부담시키는 것은 미국이 자신의 신군사전략 실행과 한국군에 대한 통제권을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행사하려는 데 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③ 서울 북부에서 서울 내의 군사작전을 수행할 부대들을 용산에 남긴다는 것은 일부 부대가 새로 용산 미군기지로 이전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용산 미군기지를 이전한다는 미국의 명분이 기만적이며, 용산 미군기지를 새로운 목적과 용도로 계속 활용하려는 속셈을 보여준다.

④ 한미연합사와 유엔사 그리고 주한미군사와 미8군사 등 모든 부대를 옮긴다는 90년 합의의 위배한 것이다.

2) 일체의 이전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고 미국은 단 한푼도 부담하지 않게 되어 있고, 이전비용 항목과 그 범위가 거의 무제한적이며, 대체시설과 그 기준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등 미국의 ‘협정’과 ‘각서’는 ‘현대판 노예문서’나 다름없다.

① 오산·평택 지역으로 용산 미군기지를 이전한다는 명목으로 미국은 미국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의 대체시설을 지어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기존의 낡은 시설과 장비를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최신 시설과 장비로 교체하고 그럼으로써 자신들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군사전력을 현대화, 고도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미국은 이전하는 새로운 미군기지 및 그 주변을 독자적인 도시 수준으로 개발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자신들의 편리를 극대화하는 반면 평택 지역의 기형화와 무제한적인 비용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

③ 골프장 등 미군 기능 수행과 관련이 없는 편의오락시설, 불법영업시설들의 이전비용까지 한국에 부담시키고 있다. 그런가 하면 모든 미군들의 개인적인 이사비용, 기지이전에 따른 수영·취미·오락활동 등 미군들의 개인여가생활의 제약까지 손실보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으며, 심지어 주한미군에 납품해 온 업체들에 대한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까지도 한국이 물어주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협정’과 ‘각서’가 현대판 노예문서임을 말해준다.

④ 현재 미국이 추진하는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민의 요구와는 거리가 먼 자국의 군사전략적 필요와 요구에 따른 것으로 한국이 이전비용을 부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더구나 미국이 한국에 이전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미군의 유지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한미소파 5조 1항에도 위배되는 불법이다.

3) 미국은 용산 미군기지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전을 명목으로 엄청난 규모의 대체부지를 요구함으로써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한국민의 요구라는 자신의 주장을 무색케하고 있다.

① 미국은 용산 미군기지를 일부만 반환하면서도 수십만 평에서 백 수십만 평에 이르는 대체부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이 우리 국민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미국의 주장이 한낱 허구이고 기만일 뿐임을 말해준다.

② “충분한 부지가 공여될 것이다”(‘협정’ 제3조 5항)는 것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판단하여 대체부지의 규모를 한국에 요구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는 독소조항이다. 이는 기존기지로의 통폐합을 통해 대체부지를 최소화한다는 90년의 합의보다도 더 후퇴한 굴욕적인 내용이다.

③ 1991년 당시 우리 국방부가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위해 26만평의 토지매입을 공시한 사실은 주한미군이 불필요하고 과도한 시설들을 이전하지 않고, 감축과 단계적 철수 원칙에 따라 이전한다면 얼마든지 추가 대체부지 없이도 이전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용산 기지의 대체부지로 수십만 평에서 백 수십만 평의 땅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희생과 부담은 안중에도 없는, 오로지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후안무치한 태도다.

4) 미국은 자신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문서의 형식을 가지고 교활한 술책을 부리고 있다.

① 미국은 포괄적이고 애매한 내용과 표현을 담은 ‘협정’은 국회 비준을 거치도록 하고, 정작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는 국회 비준이 필요없는 ‘이행 합의각서’와 ‘기술 양해각서’라는 형식에 담아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 하고 있다.

② 그러나 국가 주권과 국가 이익,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런 문제에 대하여 논란을 회피하여 자신의 일방적인 이익을 관철할 목적으로 비준 범위를 최소화하여 형식적으로 국회비준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5) 미국 자신에 의해 이미 무효화된 90년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에 기초하고 있는 미국의 협정과 ‘각서’는 원천적으로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① 90년의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는 미국 자신이 95억 달러라는 터무니없는 이전비용을 요구하여 용산 미군기지 이전 합의를 고의로 백지화시킴으로써 이미 오래 전에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미 오래 전에 무효화된 90년의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에 기초하고 있는(‘각서’ 1항 참조) 미국의 협정과 ‘각서’ 또한 원천적으로 그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② 더구나 90년의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에 ‘추후라도 한쪽 정부가 거부할 경우 법적효력이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불평등한 90년의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 폐기를 요구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용산미군기지 이전 협정

- 서울 중심지로부터 미군기지 이전을 추진하는 데 따른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 협정 -

미합중국과 대한민국은 (이하 “당사국”이라 한다).

양측의 합의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임을 재확인한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지위와 시설 및 주둔지역에 관한 미-한 상호방위조약과 미-한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른 합의, 그리고 그 후의 수정조항 (이하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로 표기한다), 관련 협정에 기초한다.

유엔사령부(UNC) 본부와 한미연합사(CFC)의 미군 부대의 서울 주둔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지원하는 한편, 주요 중심지역 주변의 미군을 재배치하고, 주한미군 부대들을 서울 중심지로부터 이전함으로써 미-한 동맹이 포괄적으로 강화될 것을 기대한다.

시의적절한 (용산기지의) 재배치는 한국 영토의 효과적인 사용과 균형된 개발, 그리고 서울 중심지역의 지속된 성장과 개발에 필수적이며 한편으로 군대의 보호, 전투준비태세, 삶의 질, 안전 등을 강화하고, 상호방위의 목적을 위해 영속적인 주한미군의 체계를 세우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 공감한다.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원칙을 확인하고 대략적인 일정을 수립하며, 주한미군 부대들을 서울 중심지로부터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 원칙

1. (주한미군) 재배치는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와 관련 협정들에 따라 이행되도록 한다.
2. 서울 중심지(용산)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부대들은 오산-평택 지역과, 필요하다면, 상호 합의에 의해 다른 지역들로 이전한다.
3. 한국은 부지와, 대체 시설들, 주한미군 이전에 드는 비용을 제공한다. 양측은 면밀한 조정과 효과적인 계획을 통해 이러한 요건들을 최대한 충족시키는 데 동의한다. 모든 비용은 SOFA 합동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준해 양측의 승인 절차를 거쳐 예산을 수립·집행한다.
4. 양측은 협정 실행 과정에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인정하며 미국은 한국측에 시설들과 부지를 반환하고, 한국은 미국측에 다른 부지와 대체 시설물을 양도하기로 합의한다. 그리고 자연환경과 공중보건의 보호와, 오염지역의 복구에 필요한 다른 조치들은 SOFA와 관련 협정들에 따라 이루어진다는데 동의한다.
5. 필요한 임무와 수용시설이 작전능력, 삶의 질, 그리고 주한미군 강화를 위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적합한 대체 시설로 이전함에 따라 서울 내 주한미군 시설과 영토의 반환은 신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6. 용산 주둔지 내의 미 대사관 부지(Non DOD Facility)의 상태는 미국과 한국 정부 당국 간에 적절한 조치에 따라 배치될 것이다.

제3조 조치의 실행

1. (용산기지)의 이전 완료 목표일은 2006년 12월 31일이다.
2. SOFA 합동위원회가 설립한 용산기지 이전 계획을 위한 임시 소위원회 (이하 YAP 임시 소위원회)는 용산기지 이전의 이행과정을 감독하고, 관련 문제들에 대해 조언하며, 적절한 실행에 대한 조언들에 대해 토의하고, 전개할 수 있도록 실무그룹들을 만들 것이다.
3. 양측은 현지 및 지역적 개발 계획을 보장하기 위해 현지 및 지역 당국과 협의해나갈 것이다.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한미군 배치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교통망, 공공 서비스, 효과적인 인프라를 제공한다. 기지 이전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역의 경제 성장과 개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상호 이해, 지원, 그리고 이전되는 주한미군 시설들과 현지 지역 사회 간의 상호 이해·지원·파트너십을 촉진한다.
4. 양측은 SOFA 합동위원회가 승인한 절차에 준해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포괄적 마스터플랜을 상호 발전시켜 나간다. 마스터플랜은 본 협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시설들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실행계획을 제공하며, 여기에는 새롭게 변경된 건물들, 각종 설비들, 도로와 토지, 그리고 사령부의 통신 컴퓨터와 정보 인프라가 포함된다.
5. 2004년 6월 30일까지 본 협정을 이행하는데 충분한 부지가 양도될 것이다. 양도될 구체적인 부지의 범위는 승인을 위해 SOFA 합동위원회에 제출된 공동 조사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대체 시설 건설은 2004년 10월 1일 착수돼 2006년 6월 30일 완공될 것이다.
6. 유엔사령부와 한미연합사 두 본부 지원에 필요한 주한미군 부대들, 서울 북부에서 서울

내의 군사작전을 수행할 부대들은 한국 국방부 인근에 남게될 것이다. 남게 될 부대의 크기, 규모, 위치는 양측에 의해 합동으로 마련하게 될 포괄적인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상호 합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7. 양측은 아래의 일정에 따라 서울 내의 주한 미군 시설들과 부지의 반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완수할 것이다.

제4조 수정

이 협정은 서면으로 상호 동의에 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이 협정의 수정은 양 당사국이 SOFA 합동위원회를 통해 서면 통고를 교환하면서 발효한다. 수정을 위한 그들 각자의 국내법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서명 통고를 교환해야 한다.

제5조 효력 발생

이 협정은 양측이 본 협정에 대한 효력 발생을 위한 각국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서면 통고를 교환한 날에 발효한다.

본 협정에 대한 증인으로 하기 서명자는 이 목적을 위하여 정당하게 각국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3년 -월 -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사본을 만들었으며,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시설 반환일

8군 골프 코스	1992년 (이전 잠정 완료)
캠프 이사벨	1992년 (완료)
서울 클럽	1999년 (완료)
TMP 애닉스(택시)	2003년
8군 휴게소	2004년
유엔 시설	2006년
캠프 그레이	2004년
서빙고	2006년
캠프 킴	2006년
캠프 코너와 용산 메인포스트(일부)	2006년
용산 사우스포스트(일부)	2008년
TMP 시설	2006년
니블로 병사와 한남 빌리지	2008년
FED 시설	2006년
성남 골프 코스	2006년

미국측
랜스 L. 스미스
중장
미 공군
미-한 SOFA 합동위원회 미국대표

리온 J. 래포트
대장
미 육군
주한미군 사령관

한국측
위성락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미-한 SOFA 합동위원회 한국 대표

조영길
한국 국방부 장관

용산미군기지 이전 협정 이행 합의각서

- 미-한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용산기지 이전 계획 특별 소위원회 합동위원회를 위한 각서 -

주제 : 서울로부터 미군기지 이전(용산기지 이전 계획) 추진에 있어 미국과 한국간 협정 이행 합의 권고(Agreed Recommendation for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1. 참조:

- 1953년 10월 1일 서명한, 미-한 상호방위조약
- 1966년 7월 9일 서명하고, 1991년 2월 1일과 2001년 1월 18일에 수정된, 시설 및 지역, 그리고 주둔군지위(SOFA)에 관한 미-한 상호방위조약 제4조하의 합의 (SOFA)
- 1990년 6월 25일 서명한, 서울로부터 미군을 이전시키기 위한 원칙적 합의에 관한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방부간의 합의각서(MOA)
- 1990년 6월 25일 서명한, 서울로부터의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1990년 6월 25일의 합의 각서(MOA)에 대한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방부간 체결한 양해각서(MOU)
- 위 세 번째 항목(c)에서 언급한 합의각서(MOA)를 합동위원회 권한 내에서 "(SOFA) 제2조와 제5조에 따라 시설과 영토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로 인정해 달라

는 한국정부의 요청이 1991년 5월 20일 승인됐으며 그 내용을 기록한 미-한 SOFA 합동 위원회의 결의. 1991년 6월 7일, 제169차 미-한 SOFA 합동위원회 회의록 13번째 단락과 별항 19.

f. 1993년 1월 14일, 대한민국이 요청한 서울로부터 미군 이전에 관한 기술 개발 양해각서, FASC 태스크 2936

g. 2003년 5월 14일, 공동의 가치, 원칙과 전략에 대한 미-한 공동성명서.

h. 2003년 9월 XX일 서명한, 서울중심지로부터 미군 기지 이전을 추진하는 데 따른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 협정.

i. 용산기지 이전 계획의 두 번째 단락 제3조에 따라 용산기지 이전 계획 임시 소위원회 (YRP 임시 소위원회)는 용산기지 이전 실행을 감독하고, 관련 문제들에 대해 조언하고, 용산기지 이전 계획(YRP) 실행에 대한 조언들에 관해 토의를 거쳐 전개할 수 있도록 실무그룹들을 만들도록 돼 있다.

2. 목적:합의 권고(the Agreed Recommendation)에는 양측이 합동위원회를 통해 앞에 언급된 참조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 용어와 조건이 규정돼 있다.

3. 상호 합의 원칙에 대한 설명:

a. 용산기지 이전을 통해 합동 작전능력, 전투 준비태세, 삶의 질, 그리고 미군 인력을 위한 지원이 강화될 것이다.

b. 본 계획하에 주한미군 임무와 기능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모든 토지와 대체 시설들은 한국이 제공할 것이며 미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다. 이런 필요조건들은 기존 시설의 규모와 기존 시설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전할 새 기지에서 임무와 기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설들과 지역들에 따라 결정된다. 필요조건들은 미 국방부 기준에 준하며, 미국에서 건설된 것과 유사한 시설들로 일치시킨다. 건설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 있을 것이다. 필요한 시설들은 본부들, 행정국, 의료시설, 지원 및 삶의 질과 관련된 시설들, 주한미군 병력 및 동반 가족들을 위한 숙소, 배전/징수시스템(collection system), 포장도로, 배수로, 가로등, 조경, 담장, 문, 그리고 완벽하고, 안전하고, 유용한 시설을 위해 필요한 부지 개발들이 포함된다(그러나 여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SOFA 규정에 따라 필요한 모든 땅과 시설들은 한국이 미국에 양도할 것이다.

c. 한국은 용산기지 이전 계획을 이행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 조달 및 용역을 제공할 것이다. YRP 임시 소위원회는 아래 자금조달 규정에 따라 모든 비용을 검토하고 법적으로 비준할 것이다.

4. 계획과 실행방안 수립을 위한 필요조건들:

a. 계획, 실행방안 수립, 설계, 건설 절차들은 합동위원회가 승인한 용산기지 이전 계획을 위한 기술 양해각서에 따를 것이다.

b. 양측은 위 첫째 단락에서 언급한 절차에 따라 포괄적 마스터플랜을 상호 발전시킬 것이다.

(1) 포괄적 마스터플랜은 2003년 10월 착수돼, 2004년 1월 비용이 완전히 지급될 것이다.

(2) 포괄적 마스터플랜은 본 협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 프로그래밍 문서화를

제공할 것이다. 여기에는 새롭게 변경된 건물들, 수도 및 전기시설, 도로와 용지, 사령탑 통신 컴퓨터와 정보 인프라가 포함된다.

5. 시설들과 용지들:

a. 서울로부터 주한미군 부대들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부지는 SOFA 시설 및 공여지 소위원회(Facilities and Area Subcommittee) 절차에 따라 미국에 양도될 것이다. 양도된 부지의 점유물 철거뿐 아니라, 시설 및 공여지의 양도 및 반환은 상호 합의된 일정에 따라 이행될 것이다.

b. 2004년 6월 30일까지 본 협정을 이행하는데 충분한 토지가 미국에 양도될 것이다. 양도될 구체적인 토지의 범위는 공동조사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이 자료는 승인을 받기 위해 SOFA 합동위원회에 제출될 것이다.

c. 대체 시설들의 건설이나 제공은 2004년 10월 1일에 시작돼 2006년 6월 30일 완료될 것이다.

d. 참조사항에 따라 앞서 반환된 미 8군 골프코스, 캠프 이사벨, 서울 클럽과 다른 시설들은 전체 이전의 일부로 간주될 것이다. 임시 골프코스의 대체 골프코스는 본 합의 권고의 조건에 따라 완성될 것이다.

e. 주요 기구 위치:

(1) 유엔사와 한미연합사 본부는 한국 국방부 청사 인근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위 본부들을 지원하고 서울과 서울 북부 작전수행을 위해 필요한 주한미군 부대들은 용산에 남을 것이다. 남게 될 부대의 크기, 규모, 위치는 SOFA 합동위원회가 승인한 포괄적 마스터플랜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한국은 남아서 주둔할 부대 지원을 위한 모든 시설들을 제공할 것이다. 여기에는 새 시설물 건축과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이 포함된다. 필요한 모든 시설들은 효율성과 군대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 국방부 영내에 한 지역으로 통합될 것이다.

(2) 주한미군 본부, 부속 부대와 사무소들은 추가 영토가 미국에 양도됨에 따라 오산 공군 기지로 이전할 것이다.

(3) 미 8군 본부와 현재 서울에 있는 주요 부속 부대들, 부속 사무소들은 추가 영토가 미국에 양도됨에 따라 캠프 험프리로 이전할 것이다.

(4) 다른 주한미군 부대, 사무소와 기능들은 승인된 마스터플랜에 따라 오산 공군기지, 캠프 험프리, 캠프 캐롤이나 캠프 헨리로 이전할 것이다.

6. 재원:

a. 한국은 용산기지 이전 계획을 이행하는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조달하고 용역을 제공할 것이다:

(1) 사업보고서, 마스터플랜과 설계도 작성과 검토, 구조물의 취득, 감독, 관련 계약들의 관리를 포함한 설계 및 건설 서비스.

(2) 포장, 하역, 보관, 인력 수송, 장비, 보급품 등을 포함한 운송과 이동 서비스.

(3) 통신장비 설치 및 제거, 메시지와 데이터 송출, 통신 시설 대여 등을 포함한 통신 서비스

- (4) 정규직이든 파트타임이든, 임시직이든, 영구직이든 주한미군 직원들의 개별 이사 비용.
- (5) 이전으로 발생하는 주한미군 지원 프로그램 부족분에 대한 임시 비용 조달.
- (6) 이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른 모든 비용들. 이전에 앞서 단계적으로 폐지할 수 없는 서비스 합의와 계약을 파기하는데 따르는 비용이 포함된다. 주한미군은 효과적인 계획과 관리를 통해 이런 비용들을 최소화할 것이다. 모든 소요비용은 SOFA 합동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양측에 의해 예산과 지출이 비준될 것이다.
- b. 대체 시설들은 기술 양해각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물자로 제공될 것이다. 부대와 임무, 기능, 인력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수송 서비스는 물품으로 제공받거나 운송기금을 통해 조달될 것이다. 다른 모든 비용들은 운송기금으로 지급될 것이다.
- c. 본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운송기금은 한국내 은행에 양측이 정한 구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이용해 운용될 것이다.
- (1) 이자소득은 같은 구좌에 적립될 것이며 본 협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인정된 비용을 조달하는데 사용할 것이다.
- (2) 본 계좌로부터 기금을 인출하는 것은 본 협정 이행을 위해서만 가능하며, 양측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전이 완료된 후 구좌에 남은 기금은 한국정부에게 반환될 것이다.
- (3) YRP 임시 위원회는 이 구좌를 감독하고, 적립과 인출이 적절한 시기에 허가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보장할 것이다. 공동 실무그룹이 본 구좌를 관리할 것이다. 이 구좌의 상태와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서가 SOFA 합동위원회에 분기별로 제출될 것이다.

7. 미디어: 이전 문제를 일반에 공개할 때는 상호 동시에 전개하며 공개 전 함께 검토한다.

8. 수정. 수정 권고는 언제나 양측의 동의하에 제출돼야 한다. 수정 요청은 수정내용의 발효 요청 일자보다 최소한 60일 앞서서 해야 한다.

9. 효력 발생. 본 합의권고(AR)는 서울로부터 미군기지 이전 추진에 대해 미국과 한국간의 본 협정은 양측이 각국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내용의 서면 통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대니얼 M. 윌슨 JR
대령, 미 육군
미국측 용산기지 이전 특별소위원회 의장

김동희
대령, 한국 육군
한국측 용산기지 이전 특별소위원회 의장

합동위원회 각서
2003년 -일 합동위원회의 긴급조치에 의해 승인

랜스 L. 스미스
중장

미 공군

미-한 SOFA 합동위원회 미국 대표

위성락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미-한 SOFA 합동위원회 한국 대표